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신고 27일까지(2일 연장)··· 13일부터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866명은 오는 27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원래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됐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이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을 추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은 미리채움 서비스에 서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업종 한 개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세금비서의 질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과거 신고한 내용을 제공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내달 3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을 마쳐야 한다.

### 원클릭 연말정산···

### 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 국고보조금 3억원 넘는 비영리법인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법안 통과시 2000개 이상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의 약 3배로 늘어난다.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개이고, 이 중 23%인 1,394개 사업자(이중 595곳이 비영리법인)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졌다.